

# 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 4대 의제 진척 없고 협상내용 공개 안돼 현대차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난항 우려

광주지역 노동계가 현대자동차의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 사업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는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의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이 공장 설립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19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킨 광주시의 투자협상을 규탄하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협상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이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

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은 뒷전인 채 시민 모두를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 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최저 4000만원으로 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평균 연봉이 주야 8시간씩 교대 근무해도 5년간 연봉이 반토막 수준인 2100만원에 그치고 노조 설립 5년간 제한설, 협력업체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중해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 공개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면서 "노동계가 제발 협조

해 달라"며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7~18일 산별, 사업장별 의견을 취합한 뒤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차 투자 협상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민주노총도 일찌감치 현대차 투자 협상에 불변한 입장을 보이며 불참 기조를 유지해온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과를 기대를 모은 현대차 투자 사업에 대한 양대 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 설립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 노동 단체들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떠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최정열 수석 부의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노동계가 적극 환영하는 사업이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되 현대차 투자 협상은 광주형 일자리

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협상은 한창 진행중이며, 임금 수준, 특히 초임액수를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은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 사업으로서, 노동계 참여가 중요함에 노동계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더 많은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현대차는 빛그린국가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에 유동국 선임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유동국(사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선임됐다.



경영능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또 국회와 중앙부처 등 산·학·연 및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산업 전반에 대

전남테크노파크는 19일 원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제6대 원장으로 유동국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8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후보를 공개모집했으며, 공모에 7명이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2명을 원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유 선임자는 2010년부터 4년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재임 시 산업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조직

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10월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임명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조직·인사·문화 혁신안 본격 추진

### 일몰제 강화·행정업무 간소화

광주시가 복지·경제·문화·예술 등 사업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조직 혁신에 나선다.

또 정책이나 보조사업 등에 대한 일몰제(3년)를 강화하고 행정업무 간소화한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9일 "혁신·소통·정령의 민선7기 시정가치를 반영한 조직, 인사, 문화 등 시 내부행정 4개 분야 20개 혁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 혁신안은 시민편의 증진과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대응해 행정변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정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 인사, 문화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현안조정회의, 혁신아이

디어발굴 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서장의 추천, 개인의 희망(사유), 경력(근무부서, 근무성적, 상훈, 평가결과, 교육 등)을 고려하는 일 중심의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권자만 열람할 수 있는 '인사 핫 라인' 구축과 본인희망 보직경로제, 인사청탁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공무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게 된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행정 혁신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대상 확대

### 우승희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전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극소수만 지원을 받았다. 때문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 대

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을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확대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마지막까지 합당하게 예우하도록 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지원하지는 취지를 살려, 내년부터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 의미를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 생활안전 대책 상황 보고회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후 시청17층 재난안전대책 회의실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위해 '2018 추석명절 시민생활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광주광역시 제공>

## "도시철도 공론화 비용 낭비·광주형일자리 무산뎀 市 책임"

### 광주시의회, 시 현안사업 질타

광주시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형일자리 등을 통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건립 사업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광산1) 의원은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시가 구성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4년 전 윤창현 시장이 일부 시민 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임기 내내 의견 수렴만 하다가 분열과 갈등만 키웠는데 민선

7기에도 공론화라는 밧에 걸려 광주시정을 뒤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시장은 임기 내 착공이라는 약속도 못 지키고 무능했던 도시철도 건설행정과 함께 물러났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용섭 시장도 이를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그 트라우마가 광주시민을 전율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표성도 확인되지 않은 특정 시민단체와의 공론화 약속 때문에 2호선 건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답도 없는 공론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광주형 고질병으로 인식돼 버린 강성노조·반대만 하는 시민단체·조정능력 없는 지방정부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나게 하는 광주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주는 택시지구가 42개까지 증가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는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이른 시일 안에 2호선을 개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연주(비례) 의원은 이날 "현대차 투자

유치 위기의 책임을 민선 6기와 노동계에 떠넘기면 안 된다"며 "노동계를 배제하고 비밀협상을 강행해 신뢰를 깨뜨린 당사자가 바로 민선 7기"라며 이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의원은 "노동계 참여를 원치 않았던 광주시와 현대차가 왜 이제 와서 한목소리로 노동계 뜻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협상 당사자였던 광주시와 현대차가 져야 옳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이제라도 노동계가 협상에 참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둘러싼 구호로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재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